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자체와 두텁고 촘촘하게 챙긴다

- 동절기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 점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당부
- 소상공인 효율향상 지원사업 참여 독려, 에너지 안전관리 강화 등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최남호 2차관 주재로 1.18.(목) 오후, 영상회의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에너지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에너지 효율혁신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겨울철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및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간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 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유·액화석유가스(LPG) 구입지원 등 난방비 지원사업의 이행현황을 지자체별로 점검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거동 불편 또는 자격 여부사용 방법 등을 몰라 에너지이용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 가구 모니터링 강화, 이용권 전달 핫라인 운영 등 전달체계 개선과 함께 맞춤형 1:1 채널을 활용한 사용정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활용 등의 홍보 강화에도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교체사업, 전기·가스 캐시백 등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에너지 절약·효율혁신 정책을 안내하고, 지자체에서도 국민참여 확대, 정책 제언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난방기구 등 에너지 사용시설·기기로 인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등 관내 보일러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확대 등 사고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점검을 강조하였다.

최남호 2차관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핵심”이라고 언급하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절약 실천,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이 기초지자체와 소속·산하기관까지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중앙-지자체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총괄>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효율과	책임자	과 장	김현철 (044-203-5140)
		담당자	사무관	최승효 (044-203-5141)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효율지원팀	책임자	팀 장	박은표 (044-203-5160)
		담당자	사무관	이상은 (044-203-5161)



1. 개최 목적

- ☐ 겨울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현안 논의
- ☐ 에너지 효율혁신·절약에 대한 광역자치단체 이행상황 점검·독려

2.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4.1.18(목) 14:30~15:30 / 정부서울청사

* 온라인(영상회의)+오프라인(정부서울청사) 병행

- ☐ 참석 대상

- (산업부) 2차관(주재), 에너지정책관, 에너지효율과장, 효율지원팀장 등
- (지자체) 17개 광역자치단체* 에너지 담당부서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유관기관) 에너지공단, 에너지재단, 한전 등

- ☐ 주요 내용 및 홍보 메시지

- 지자체별 겨울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 점검
-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및 소상공인 효율향상 지원사업 협조
 -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등유·LPG지원 등 / (소상공인)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닫기 등
- 보일러 등 에너지 사용시설·기기 안전관리 강화

3. 진행 순서

구 분		주요 내용
개회	(14:30~14:33)	• 2차관 인사말
발표	(14:33~14:40)	• 겨울철 에너지 복지·효율지원 추진현황 및 협조 필요사항 (산업부)
토론	(14:40~15:28)	• 지자체별 발언 및 토론 (지자체)
폐회	(15:28~15:30)	• 2차관 마무리 발언